

민주 전당대회 전북지역 합동연설회 열기 뜨겁다

당원들 '환호성'... 후보들은 응원에 '화답'

지지자 3000여명 참석... 전북 맞춤형 공약 약속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당원들과 현 정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 합동 연설회를 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추산 장내 2,500명·좌외 500명, 총 3,000여명이 체육관 장내를 뿔뿔하게 채워 후보들에게 환호를 보내는 등 현장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연설회 시작 전부터 체육관 앞에 설치된 부스에 있는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 후보들을 응원했다. 이들은 각 후보들 기호를 상징하는 풍선을 든 채 이재명 당대표 후보 대선 선거 로고송이었던 '질풍기'를 틀어놓고 응원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응원 문구도 눈에 띄었다. 당원들은 "더명, 내조의 여왕", "명과 함께 승리" 등 문구를 새긴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 후보와 함께 복직하는 후보에 나섰다. 유일한 호남 지역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후보 부스에 다른 부스들에 비해 줄이 더 길게 서 있는 등 지지자들이 북적였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현 정부 비판

에도 열을 올렸다. 이들은 당에서 배부한 '이진속 탄핵' 문구의 손피켓을 든 채 탄핵안이 받아들인 이진속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구호로 외쳤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후보의 역점 법안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통과"를 외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북 당원들의 열띤 응원에 화답했다. 한 목소리로 지역 연고를 강조하거나 호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견 발표 시작과 함께 두 손을 번쩍 들며 "동학의 발상지이자 이재명 정치 신념인 억강부약 대동세상 신념의 출발지인 전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전북이 사는 길을 제시하겠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도 언급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지역 경선들에서 '개딸의 당 점령'을 언급하며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데 집중했다. 발언 도중 "사람 앞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 개딸이라고 하냐"는 항의가 있기도 했지만 김 후보는 지난해 '젤버리 사태' 정부 책임을 언급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북 민심 사기에 나섰다.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전북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전라도 오니까 살았소. 정치 검찰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 해체합시다"라고 호응했다. 민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후보들 가운데 최하위권이

지만 지역구 광주 공산율이 있는 호남에선 득표율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있다.

전주가 고향인 한준호 후보는 "전북의 아들 인사 드린다"고 외쳐 당원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라며 "2차 전지의 새만금이 있고 익산의 기본소득 실현이 있다. 저평가 시대를 끝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도 함께 열렸다.

이날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재선)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86.37% 찬성표를 얻어 앞으로 2년간 도당을 이끌게 됐다.

이원택 신임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초가 국민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지방분권·균형발전 성공적 추진 '맞손'

자치분권포럼 등, 협약 체결

(사)자치분권포럼(이사장 이명연)과 국회 좋은정책포럼(대표 전현희), (사)좋은정책포럼(대표 임혁백)은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자치분권포럼 이명연 이사장, 전현희 국회의원, 임혁백 교수(전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 오인섭 (사)자치분권포럼 대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사)자치분권포럼 김재위원장 나인권 도의원, (사)자치분권포럼 전주승위원장 임실위원장 김병이 임실체육회장 및 (사)자치분권포럼 지역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 골자는 '지방 정부, 특별 목적 관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의 ESG 경영과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한국형 연방주의 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각 기관이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방의 균형자치 발전은 물론 각 기관의 ESG 경영 등의 다양한 연구 과업과 사업 수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연 이사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ESG 경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연대와 협력은 더 좋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30% 득표율 될 수 있도록 투표해달라"

'민주 김두관 당대표 후보' 이동진 정무특보 "균형된 투표 여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바로미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선거캠프의 이동진 정무특보가 지난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특보는 전북지역 당원의 선택이 민주당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30%의 득표율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다가오는 2028년 지방선거와 다음 해인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할 매우 중요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 중차대한 시적이다"라며, "정당의 최종 목표인 정권 창출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3일 전북도당 당원대회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해 내는 수권 정당이 되느냐 아니면 불입 정당이 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지역 당원들의 균형된 투표를 당부했다.

이 정무특보는 "전북지역 당원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에서 90% 가까운 수치의 득표율을 올린다면 불행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번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하고 말 것이다"며, "균형된 투표 여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전북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며,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읊소했다.

이 정무특보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정당으로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인 위대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선거 캠프의 이동진 정무특보가 지난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신 국민들께서 인정하는 수권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오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지며, 전북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3일 원광대학교 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이재명 후보 외에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가 출마해 지역을 두루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체 약 120만여 명의 당원 중 전북 당원은 약 15만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정치적인 식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만드는 데 있어 전북 당원의 관심이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북에서 어떤 득표율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북자치도당위원장에 이원택 의원

'尹 정부 기초, 국민 무너트려 당원들과 함께 끝장내자' 전북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재선)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86.37% 찬성표를 얻어 앞으로 2년간 도당을 이끌게 됐다.

이원택 신임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초가 국민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당원대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최현욱 전북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전북의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도당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이처럼 전북을 출대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전북의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했다"며 "이원택 신임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전북자치도-익산시, 청년 창업가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익산시는 지난 3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스타트업(Start-up)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원 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민생 현장을 방문하기 위함으로, 민주당과 전북자치도, 익산시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당선된 이원택 의원이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도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윤석열 독재에 맞서 싸우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당원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했다.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처음 출마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맞장을 뜨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끝장낼 때까지 맞장을 뜨고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났으나 앞으로가 더 처절

한 시간이 전북에 닥칠 것이다. 전북은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싸워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열렸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도민을 간첩으로 표현하는 막말이 있었다"며 "이 정권은 구제 불능이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도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난해 정부가 발표한 창업 동향을 보면 전국은 전년 대비 6% 줄어든 반면, 전북은 5.2% 늘어나는 등 우리 지역은 창업하기 좋은 곳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오늘 현장 목소리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청년 창업가분들이 일할 맛 나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청년 창업가와의 간담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진욱 비서실장, 윤종준 원내대변인,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순창서 정책간담회

전북여성정책연구소는 지난 2일 순창군에서 시·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군 정책간담회는 이날 순창군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5개 시·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순창군 간담회에는 주민복지과 김미경 과장, 여성가족혁신화 팀 김도희 팀장, 박진희 주무관, 여성정책연구소 유은경 소장과 백미숙 연구위원, 거점형양성평등센터 손미혜 센터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정형 컨설턴트와 장지혜 전담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여성정책연구소와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거점형양성평등센터의 연구 및 사업을 소개하고, 순창군의 여성가족 사업 및 성평등 업무 관련 현황을 공유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역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여성정책연구소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유은경 소장은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군 담당 부서와 소통과 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